조국 "전북 발전 지원할 것"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 전국 시도당
첫 방문지로 전북 택해
"전북에서 놀라울 정도로
강한 지지 보내줘" 인사
"민생 문제 심각" 정부 비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전국 시·도당 첫 방문지로 전북을 택했다.

조국혁신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모교에서 추모를 한 뒤 지역 기자들을 만나 전북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 12명은 22일 KTX 열차로 익산에 도착,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찾았다.

전북도당 총선승리보고대회의 시작이자 총선 후 전국 시도당 관계자와 당원을 만나는 첫 일정이다.

조 대표 일행은 참배 후 전북지역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총선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정비와 법 보완에 당 차원의 관심이 크다며 지원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총선에서) 전북에서 놀라울 정도의 강한 지지를 보내줬다"고 인사한 후 "전북특별법 보완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증가 속도와 양이 너무 느려 지방분권이 안 되고 있다. 특별균형발전 회계문제를 늘려야 한다는 약속을 다시 반복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전북 현안에 대해, 새만금 뿐 아니라 특별자치도법 등 전반에 대해 당연히 논의할 것이다"면서 "전북 출신인 강경숙 당선인과 김관영 전북지사 등을 포함해서 항상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수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것은 곧바로 민생 문제로 직결되는데 (현 정권이)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개원이 되면 조국혁신당은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차례대로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만의 민생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범야권 정당과 공통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정책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조 대표와 당선인들은 전북 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제안합니다! 이 법안부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시도당, 당원 등과 함께 분야·사안별 의견도 교환했다. /뉴시스

尹,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

'소통' 역량 강조… 야권 "정치할 생각 없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내정을 직접 발표했다. 정 의원은 아직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임명 내정 단계다.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의 신문기자, 5선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약력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소통' 역량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각, (여)당, 또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방향, 정책은 좀 세워져 있다"며 향후 국정의 방점을 소통 강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윤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 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야권은 이날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된 것을 두고 윤핵관, 친일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인재가 없긴 없나 보다" 등 성토했다. /뉴시스

"尹, 채 상병 특검 거부권 말라… 김 여사 특검 재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채 상병 모교 원광대서 추모행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 이후 첫 순회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채 상병의 모교인 원광대학교에 마련된 추모비 앞에서 묵념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건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좌우 문제도 전혀 아니"라며 "이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연구개발(R&D) 예산 등 과학기술 예산을 원위치시키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워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어려운 건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 관련 범죄 비리 협의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의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소환하면 수사받겠다는 한마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과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는 선거기간 한번 해보고 마는 이야기가 아니"라며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절차에 따라 조기종식을 이야기할지는 계속 이야기해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남원시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손중열 의원 "산 모티브로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오동환 의원 "소상공인 안전지원금 추진 검토를"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손중열 의원

오동환 의원

22일 열린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손중열 의원은 그동안 꾸준한 방문객 수를 유지했던 지리산 탐방객이 2021년부터 서서히 줄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을 모티브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리산둘레길 1코스와 주천면 산수유꽃축제, 둘레길 전체 코스를 연계할 산수유꽃 공원 조성, 지리산 견두지맥 구간, 만복대-영제봉-숙성재-밤재, 파근사터와 용궁마을을 탐방할 수 있도록 법정 탐방로로 지정, 만행산과 승련사, 귀정사, 보현사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 포행길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오동환 의원은 서민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에 맞는 지원으로 효율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자와 종사자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의 추진 검토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 및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의회 임시회는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남원시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시장 제출 안건 6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265회 임시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 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가 지원해야"

윤수봉 도의원, "이·통장 기본수당 표준액 인상… 기초 지자체 재정 부담 심화"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윤수봉 의원은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이장·통장의 역할과 수고를 감안했을 때, 기본수당 인상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본수당을 비롯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수당 인상으로 인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기본수당, 상여금(연 200%), 회의 참석 수당(1회당 2만원, 월 2회)으로 구성된다.

윤 의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규모에 비하면, 기본수당 인상액은 적은 규모라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고 꼬집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지자 이미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수당을 비롯한 활동보상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 곤혹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체감하는 난감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지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만 보더라도 명징하게 입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정원 기준 8,298명의 이장·통장에게 지원한 활동보상금은 약 386억원가량이었지만, 올해 2월 정원 기준 8,328명에게 기본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할 경우 약 116억원이 증가한 502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군당 평균 약 8억2,000만원가량으로,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겐 큰 돈이다.

윤 의원은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역대급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도 부족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 증가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을 전액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인 동시에 선심은 정부가 쓰고 책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함으로써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것 역시 정부가 결코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주요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일간 총 22개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을 보고받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상황을 점검해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의 중점사업인 부안 청자밸리 조성사업,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그간 제기했던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광수 의장은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며, "주요 사업장 답사시에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과 군정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도내 청년 경제적 자립·안정적 금융생활 지원 근거 마련

윤정훈 도의원,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기본법'에 맞춰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청년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조례가 대폭 보완됐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소비자교육 및 상담 지원,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 수립·시행 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참여 인원을 기존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확대·개정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2일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해 재정·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김민균·김재근 세무사, 김용현·김반석 회계사 등을 포함한 총 10명이다.

위원들은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지난 1년간 예산 집행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부안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낭비요인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여 효율적 예산 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